

 정책동향 ...

KOV

벤처촉진지구에 600억 지원

벤처촉진지구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위해 총 6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벤처촉진지구를 지방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비 300억원과 지방비 300억원 등 총 600억원의 자금을 조성,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특히 올해엔 벤처촉진지구의 신규 지정은 지양하는 대신 지역 혁신주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 중심의 추진협의체 운영,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협력사업 등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수도권 소재 벤처촉진지구에도 올해부터 국비를 지원, 벤처기업의 상호 네트워크 활동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송중호 벤처정책과장은 “기업을 일정 지역에 단순히 입주시켰다는 사실만으로 저절로 클러스터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집적된 기업과 연구소들이 정보·지식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은 - 기보 中企, 벤처 지원 나선다

산업은행(총재 유지창)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기보캐피탈과 함께 특허투자조합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결성된 펀드규모는 100억원으로 산업은행이 30억원, 특허청이 20억원, 펀드운용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50억원을 각각 출자하며 출자금 전액은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 지적재산권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우량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된다.

산은은 투자대상업체 발굴시 산은의 기술력평가 전담부서인 산업기술부와 특허청 지정기관의 기술자문을 받아 성장성있는 우량기업 선별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본부장은 “지적 재산권을 취득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에 결성된 특허투자조합1호 펀드의 반응이 좋으면 추가조합설립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은은 지난해 특허청과 특허기술의 사업화와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중기청,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접수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올해 정책자금 3조원 중 상반기에 집행되지 않은 5600억원을 하반기에 공급기로 하고 7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를 통해 업체들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번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창업자금 100억원 ▲구조개선자금 3500억원 ▲수출금융지원사업자금 800억원 ▲협동화사업자금 1200억원등이다.

시설자금의 경우 생산설비, 건축비, 정보화시스템구입자금과 공장매입, 기업 인수·합병자금과 협동화자금의 부지매입, 공장건축비 등을, 운전자금은 도입설비에 대한 시운전자금, 창업 및 기술개발을 사업화하는 기업의 원부자재 구입비·연구개발비·시장개척비 등을 중심으로 지원된다.

특히 이번 정책자금의 신청·접수는 그동안의 지원절차를 대폭 개선했다는게 특징이다. 신청서식은 17쪽에서 4쪽으로, 제출서류는 6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 했다. 첨부서류도 재무제표만 제출하도록 했다.

또 구조개선자금중 시설자금은 종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일

반금형도 포함했으며 건축비 지원의 경우 지원비율을 70~80%에서 100%로 확대했다.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관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 산업동향 ...



중기벤처, 기술도입보다 기술수출에 더 관심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은 선진국 기술도입보다는 개도국을 상대로 한 기술수출에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해외기술협력 활동 강화 차원에서 지난 4월 말 피앤피리서치에 의뢰해 29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술수출 의향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업체 66.9%(196개)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해외기술도입에 대해서는 48.1%가 관심있다고 응답했다.

기술수출 희망국가로는 중국이 29.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일본 및 북미가 각 16.4%, 동남아 13.6% 순이었다. 기술수출을 희망하는 분야는 정보통신이 35.2%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계소재(19.4%), 전기전자(18.9%) 순이었다.

기술도입과 관련,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는 정보통신관련 업체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반면 기계소재 관련 업체는 3분의 2 가량이 관심을 보였다.

기술도입 대상 국가는 일본이 30.9%로 가장 높고 이어 미국(30.1%), 유럽(22%), 러시아(12.7%) 순이었다.

☞ 업계동향 ...



〈BT〉 경쟁력 한국 '12위'

생명기술(BT)산업 육성을 위해선 유전체 연구에 통합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기술개발과 기획, 평가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안두현 박사팀은 'BT분야의 혁신 추이 및 경쟁력 분석' 연구를 통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에 등록된 한국인 특허는 46건으로 미국의 0.6%, 일본의 6.0%에 불과하고 호주에 비해서도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준인 세계 12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유전체 특허에서 한국이 등록한 특허는 8건으로 미국의 0.4%, 일본의 3.8%, 호주의 22.9%에 불과해 BT부문 경쟁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서는 이처럼 취약한 유전체 연구를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적재산권 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유전체 연구와 바이오인포매틱스 등 전문화된 특수 기술분야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IT〉 정통부 직원에 10월부터 사법경찰권 부여

오는 10월부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단속하는 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이 부여돼, 단속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속 사각지대로 꼽혀온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맡겨진 서버(컴퓨터)와 외근 회사원의 노트북에 대한 단속도 예상된다.

정통부는 2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와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는 감청 설비 단속을 맡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지위를 부여하는 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중순께 발효된다"고 밝혔다. 지금은 정통부가 단속을 벌여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경찰로 하여금 확인 조사를 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정통부 단속반 직원이 직접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정통부는 서울체신청에 3팀 12명, 나머지 7개 지방 체신청에는 2팀 8명씩의 사법경찰관을 두어 상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들은 인터넷데이터센터의 서버, 기업 사무실에서 사용중인 컴퓨터, 회사에서 외근 직원들에게 업무용으로 지급한 노트북 등을 대상으로 불시검문 형태의 단속도 할 수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경찰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데다,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도 부족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10월부터는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기술동향 ...



산자부·과기부·정통부 함께 차세대 신기술 20개 개발키로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과제 선정과정에서 참여하게 맞췄던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가 그동안 중복됐던 24개 과제 중 20개 과제를 공동 개발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지능로봇 등 4개 분야에 대해서는 부처간 입장이 여전히 맞서 다음달 중순까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주관 부처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처간 중복된 24개 과제에 대해 협의한 결과 시스템온칩, 포스트PC 등 20개 과제는 기반기술과 응용기술 등으로 나눠 최소 두개 부처 이상이 공동 개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지능로봇 ▲텔레메틱스 ▲디지털TV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전문가회의와 국제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께 최종 분담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 프로젝트는 향후 5~10년 뒤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게 될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그동안 ▶산자부는 미래형 자동차기술 등 69개 품목▶과기부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 등 50개 품목▶정통부는 이동통신 등 9개 품목을 차세대 성장동력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이 중 24개 과제가 겹쳐 부처간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KOVA